

A Study on Measures to Conflict Resolution in Case of Stabilization Operations in North Korea

Seung Hak Na[#], Cheol Ho Yang⁺

Department of Military Studies, Cheongju University, 298 Daesung-ro, Sangdang-gu, Cheongju,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solutions for resolving conflicts in the midst of stabilization operation, which emerges as critical in modern war but has been insufficiently researched. For this purpose, various examples were applied to the factors suggested by the March and Simon's collective conflict model, such as the need for shared decision making, goal differentiation and different cognitive factors, through which the adequacy of the factors of the collective conflict model were verified. The measures to conflict resolution in case of stabilization operations in North Korea suggested in this study include military integration based on shared decision making, promotion under the unified goal, shared common value and social norm among the society's members, and establishment of values and identity for achieving social integration. The study helps recognize the need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n conflict resolution.

Key words: North Korea, stabilizing operation, conflict, military integration, unified Korea

1. 서론

북한의 급변사태로 한국군이 북한지역에서 안정화 작전시 사회문화적 이질감 등이 상당할 것이다. 이는 70여 년 동안 남북한이 추구해온 이데올로기로 인한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로 많은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북한지역에서의 안정화 작전시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는 군사통합이다.

군사통합의 성공여부는 곧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또한 군사통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분야의 기능적 통합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전체적 통합이 실패로 돌아 갈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Hoffmann, 1968: 397-458).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한 베트남, 예멘, 독일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통일과정에서 통합하는데 순탄치만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혼란과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통일 및 통합과정에서는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특히, 평화적 수단에 의한 통일이 될 것이라는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

[#] The 1st author: Seung Hak Na, Tel. +82-43-229-7859, e-mail, shakna@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Cheol Ho Yang, Tel. +82-43-229-7861, e-mail, y0300h@hanmail.net

가 필요하다.

안정화작전시 남북한 군사통합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북한 군부가 특정인물 중심으로 저항세력을 형성하여 군사반란 및 소요사태를 조장하게 되고, 이는 남북한 통일을 완성하는데 심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안정화작전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북한지역의 주민을 조기에 안정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남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이 통일과정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통일 후에도 많은 후유증을 야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후유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도출하기 위해 March & Simon(1996)이 주장한 집단 갈등모형 요인인 공동의사결정의 필요성, 목표의 상이 또는 차별화, 인지의 상이 이상 3가지 요인들을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독일의 군사통합, 6·25전쟁과 이라크전의 안정화작전 사례에 적용하여 적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급변사태 등으로 북한지역을 안정화시켜야 할 상황이 온다면 어떤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갈등의 주요 요인을 역사적 사례를 분석하여 ‘현 시점에서 북한지역에 대한 안정화작전을 한국군이 수행한다면 성공하기 위해서 갈등요소에 대한 사전 해결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군사통합, 6·25전쟁 및 이라크전시 안정화작전에 대한 역사·서술적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안정화작전 및 군사통합 관련 기존 연구로, “한반도 통일시 후유증 최소화 방안 연구”에서 군사통합과정에서 갈등요인은 권력집단과 군사집단의 반발 가능성과 북한군 강제 전역 조치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회문제, 북한군의 사상무장으로 이념적으로 편향으로 갈등, 북한군의 선군정치 폐해로 인민들은 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어 갈등, 군사통합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사회문제화 등에 대해 주장하였다(Kim, 2012). 또한 “남북한 군사통합: 갈등요인과 대책”에서 남북한의 주변 4강과의 우호

적 관계 유지문제, 적정 군사력 수준의 문제, 통일한국의 통수권문제, 남북한의 군수산업의 구조조정 및 군수산업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 주장하였다(Kim, 2001).

그 이외의 연구를(Ha, 1996) 종합하면, 대체적으로 군사통합과정에서 분단국가의 통합 사례연구를 고찰하였으며, 연구의 분석틀에 근거하지 않고, 갈등요인에 따른 포괄적인 해소방안 제시 등의 연구위주로 진행된 데 취약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집단간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갈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March & Simon(1996)의 집단간 갈등모형에서 공동의사결정의 필요성, 목표의 상이 또는 차별화, 인지의 상이에 의한 갈등 주요 요인을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군사통합, 6·25전쟁과 이라크전의 안정화작전 사례에 적용하여 적합성을 검증하여 한반도 통일과정시 발생 예상되는 갈등 요인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군사통합 및 안정화작전간 점령 주체와 대상간의 갈등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위해 안정화작전과 군사통합 이론, 군사통합과정 및 이후 과정에서의 독일, 6·25전쟁과 이라크전의 갈등에 대한 사례연구를 위해 관련 기존 연구논문 및 단행본, 기사, 서지류 연구 자료 등을 사용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안정화작전과 군사통합

1) 안정화작전의 개념과 적용

안정화작전이란 자유화지역에서 안정된 환경을 조성 및 통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군이 정부 및 민간분야와 협력하여 인도적 지원과 사회기반시설 복구, 민간의 안전 및 통치체계를 구축하는 제반 군사활동이다. 여기서 자유화지역이란 적에 의해 국내법의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던 지역으로부터 적을 축출하고 국내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게 된 지역을 말한다(Republic of Korea Army Training & Doctrine Command, 2015).

이러한 안정화작전의 목적은 군사적인 것과 비군사적인 것을 조정·협조·통합하여 군사작전을 지원하고, 사회기반시설 지원 및 민생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정부 통치체계를 확립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는 것이다.

안정화작전은 부대의 임무, 작전지역, 작전 상황에 따라 공격 및 방어작전의 산물로 자유화지역이 확장되면서 많은 상황이 변화하기 때문에 수립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안정화작전은 전투 부대, 민사부대, 안정화사단이 수행한다.

한국군에서 안정화작전 개념이 적용된 것은 2006년 UFG 훈련 시 합동참모본부에서 상황실을 설치하고, 구성하면서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2006년 12월 “합동개념서”에서 안정화작전을 국내 평시 안정화작전과 국내 전시 안정화작전으로 구분 사용하다가, 2007년부터는 전시로 한정된 개념으로 수정되었다가 2015년 3월부터는 안정화작전 개념으로 정립되었다(Republic of Korea Army Training & Doctrine Command, 2015: 1-1~2-2).

군은 안정화작전을 통해 자유화지역이 안정화되면 정부기관으로 이양하고 정부통치 지원을 위해 많은 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력의 제 요소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각종 민간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가용능력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군사통합의 개념 및 유형

통합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개별적 단위를 이루는 부분들이 상호 의존관계에서 일관성 있는 체제를 갖춘 하나의 체제를 형성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Lee, 1997: 24). 또한 Ernst Haas는 통합이란 “완전히 다른 국가적 상황에서 정치행위자들이 기존의 민족국가에 대하여 관할권을 주장하거나 소유하는 새로운 중심부로 그들의 충성심과 기대 그리고 정치적 행동을 이전하는 과정”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Lee, 1997: 24).

군사통합은 합의의 과정을 거쳐 충분히 동화되고 유사체제로 변화되는 정치적 통합의 종속변수라고 볼 수

있다. 즉, 남북한이 어떤 정치적 통일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군사통합의 유형도 결정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비교적 최근 통합되어 통일된 독일, 베트남, 예멘의 군사적 통합을 검토해 볼 때 합의적 흡수통합, 강제적 흡수통합, 합의적 대등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Jeong, 2014: 34-41).

첫째, 합의적 흡수통합은 합병 대상 국가의 무조건적인 굴복과 무장해제를 통해 주도국가 군체중심의 군사통합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강제적 흡수통합과 성격이 유사하나 전쟁을 통한 무력사용을 하지 않고, 피 합병 국가 군제의 가용성 및 군사자산에 대한 보상까지도 고려한다. 이러한 사례는 독일의 군사통합이다.

둘째, 강제적 흡수통합은 한 국가가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또는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군사통합이 이루어지는 방안이다. 역사상 전쟁을 통한 군사통합 대부분에 해당하는 사례로서 베트남의 군사통합을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의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무력저항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셋째, 합의적 대등통합은 예멘의 1차 통합과 같이 양 당사국은 대등한 군사통합 조건에 합의하고, 당사국 군제 혼성형의 군사합병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통합은 ‘체제를 일원화 시킨다’고 하기보다 ‘단지 하나로 끌어 모은다’는 성격이 강하고, 적대관계에 있던 양국 군대의 무력 갈등요인의 해소를 제도적으로 구축하지 못하여 내전 가능성이 높고 통일만을 먼저 고려하고 군사통합은 부수적인 업무로 처리하여 통일 자체를 수포로 돌릴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상의 3가지 유형의 군사통합을 고려해 볼 때 전쟁이라는 무력수단을 배제한 가장 유리한 군사통합은 합의적 흡수통합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통합은 어느 당사자도 자의적으로 흡수되고자 하지 않는다는데 딜레마가 있다.

3) 군사통합시 안정화의 중요성

남북한 국가지도자와 정치집단, 그리고 주민들이 합의하여 북한을 흡수 통일하더라도, 군사력을 통제하는

북한군부의 완전한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한반도의 통일은 불완전한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실 예로 미군이 이라크를 점령하기 위해 2003년 3월 한 달 동안 실시했던 정규전에서는 불과 147명이 전사하였으나, 정규군간의 전쟁이 종료된 이후 안정화작전을 수행했던 2003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8년 8개월간 무장 저항 세력과의 전투에서 6,115명이 전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Kim, 2014: 59; ROK – Joint Chiefs of Staff(ROK–JCS), 2013: 3).

이와 같이 하나의 정치체제로 통일하더라도 의견을 달리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면 새로운 국가지도부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고 주민들에게 유언비어를 전파하여 민심을 동요시키는 등 혼란과 갈등을 유발시킴으로써 새로운 국가체제가 안정화에 방해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병력의 숫자가 서독연

방군보다 상대적으로 열세했던 동독군과는 달리 한국군보다 많은 병력과 재래식 무기, 대량살상무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4) 안정화작전의 성공요소

〈Table 1〉에서처럼 일반적으로 이런 안정화 작전이 전개되는 동안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세부사항들은 과업별 평가과제를 수치로 표시하여 객관화 및 계량화 평가함으로써 안정화작전을 달성할 수 있다. 즉 상황과 여건에 따라 과업과 과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과업 및 과제 평가결과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과업 및 과제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정화작전은 전투수행과정뿐만 아니라 전투임무 달성 후 국가의 총체적 재건 및 정상화까지 포함되는 통합적인 개념이다.

Table 1. Stabilization operation evaluation task and assesment task

Evaluation task	Assessment task
Military operations for stabilization ope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portant facility protection • Deterrence support • Supply line protection • Maintenance of troops defensive posture • Search and reconnaissance
Establishing private safe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assification of residents and discovery and neutralization of hostile forces • Crackdown of overthrowing force and offenders • Disarming, mobilizing and reintegrating • Movement control of refugees and residents • Main personnel and facility protection • Removal of explosives and hazardous materials • Border and Coastal Control
Support for civilian control system establish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pport for security system establishment • Support for judicial system establishment • Support for correction system establishment
Essential Public Service Recove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sistance in securing public goods and daily necessities • Public health activities • Human rights assurance support • Educational program support
Support for economy and soci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pport for welfare economic activities •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 Emergency infrastructure restoration support
Government supp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ganization of Local Self-Government and Provisio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 Dismantling hostile regime maintenance mechanism • Main facilities and resources receipt and management • Selling and Public Relations • Press media reception and control

※ Source: Republic of Korea Army Training & Doctrine Command(2015: 3-47, 3-48)

2. 갈등과 갈등관리

일반적으로 ‘갈등(conflict)’은 “특정한 하나의 집단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집단과 양립될 수 없거나 양립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목적을 추구함으로써 의식적인 대립관계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94134&cid=41991&categoryId=41991). 모든 사회는 갈등과 통합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를 통합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Emile Durkheim에 따르면 사회는 항상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갈등은 병리적인 예외적인 현상으로 본다. 그러나 Karl Max와 Max Weber로부터 유래하는 갈등론적 시각에 의하면 사회는 본질적으로 균열적, 대립적인 것이며, 갈등은 모든 사회에 편재하는 것으로 본다(Park, 1997: 6).

갈등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들이 목표의 양립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호작용할 때 나타나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Ahn, 1994: 187). 즉, 두개 이상이 상호 합치될 수 없는 목적을 요할 때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치적 갈등은 서로 추구하는 목적이 명예, 권력 또는 물질과 같은 가치 있는 것들에 배분문제와 결부될 때 발생할 수 있다.

갈등의 발생 요인으로는 학자들마다 상이하지만, 갈등 발생 요인을 ①가치와 인식 ②경제적 ③제도와 절차 ④정치·사회적 ⑤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Yun, 2014: 37-59). 갈등원인에 따른 분류로 갈등당사자가 추구하는 목표가 경제적 이익인지 아니면 자신이 중요시하는 가치인지에 따라 ①가치관 갈등 ②이해갈등 ③구조적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Park, et. al., 2005: 78-82). 또한 사회 환경이 변화하고 갈등을 둘러싼 이

해관계가 상호 복잡해짐에 따라 갈등의 영향요인은 일반적으로 갈등이 복합적 원인이 되어 나타나기 쉽고, 이 중에서 ①이해관계 ②가치관 차이가 잦은 갈등요인으로 나타난다(Lee, 2005: 8). 또한 March & Simon이 주장한 갈등모형 요인으로 공동의사결정의 필요성, 목표의 상이 또는 차별화, 인지의 상이를 제시하였다(Chon, 2005: 105-108)¹⁾. 이상과 같이 많은 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가치관 차이에 의한 갈등, 제도와 절차 등 규범적인 문제에 의한 갈등,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해 갈등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1) 갈등의 유형

갈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분류되는 유형은 차이에 의한 갈등과 동일한 목표를 둘러싼 갈등이 있다. 차이에 의한 갈등이란 갈등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궁극적 목표가 서로 양립할 수 없어서 야기되는 갈등을 말한다. 갈등의 수단 및 방법에 따른 분류유형에는 폭력적 갈등과 비폭력적 갈등, 합법적 투쟁과 비합법적 투쟁, 공개적 투쟁과 비공개적 투쟁 등이 있다. 갈등 당사자를 기준으로 한 유형에는 당사자의 규모와 기존관계에 따른 유형과 당사자의 현실인식에 따른 유형이 있다(Hong, 2003: 23-24). 이를 종합하면 아래의 <Table 2>와 같다.

2) 갈등관리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라는 용어 대신에 갈등 해소(conflict resolution), 갈등외해(conflict settlement), 갈등조정(conflict conciliation), 갈등규제(conflict regulation), 갈등통제(conflict control) 등의 용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Hong, 2003: 26).

Table 2. Lassification of conflicts

Issues of conflict	Means and methods of conflict	Criteria for conflict parties
Conflicts due to differences / Conflicts surrounding the same goals	Violent conflict / Nonviolent conflict Open Struggle / Clandestine Struggle	The size of the parties and the existing relationship / Reality recognition

※ Source: Hong(2003: 23-24)

1) 갈등 요인으로 첫째, 공동의사결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각 개별자들은 상대방의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 관용을 보일 것이다. 둘째, 목표의 상이 또는 차별성은 조직 전체 목표에서 조직 내의 각 집단 또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하부 목표로 내려 갈수록 여러 이질적이고 차별적인 하위 부분의 목표들로 갈라지는 것이다. 셋째, 조직의 의사결정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인식과정이 서로 상이함으로 인해서 동일한 현실 문제를 각각 다르게 인지하여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갈등이 심화되면 이해당사자간의 치열한 상호작용으로서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심대한 영향을 초래한다. 갈등이란 초기의 잠재적 단계에서 중극의 단계로 점차 성숙, 이동해 가는 사회과정이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갈등은 초기에 관리되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분단국이 다시 통합을 위하여 관리되어지는 갈등관리의 방법으로는 첫째, 무력(force)에 의한 갈등관리이며, 둘째, 예방(prevention)을 통한 갈등관리는 분단국 사이의 갈등관계에 있어서 긴장관계를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갈등의 타결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는 외교적 협상을 통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군축 및 협약을 통해 상호간의 긴장관계를 완화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갈등의 해소(resolution) 방법은 갈등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제거하여 갈등 자체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Lee, 2002: 186-187).

결론적으로 통일은 분단국 사이에 전개되고 있는 갈등구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른 유형의 통일과정과 통합유형으로 전개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관리를 통해 갈등관계를 최소 및 해소하여 통합관계로 변화, 발전하는 과정은 분단국의 통일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통일된 국가에서 복잡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효과적인 통합을 통해 갈등관리를 실현함으로써 국가기반을 조기에 안정화가 필요하다.

3. 연구의 분석틀

남북한의 군사통합 및 안정화작전시 갈등에 관한 연

구는 자료접근이 쉽지 않아서 타 분야 보다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편이다. 기존의 연구결과들에 대하여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주제별로 고찰하면, 북한지역에서 안정화작전에 관한 방안 연구가 주류이며(Jeong, 2016; Cho, 2014; Park, 2016), 군사통합 유형 및 통일에 관한 이론(Nam, *et. al.*, 2016: 1-28), 이라크전 사례를 통한 통일한국의 안정화작전 향상 방안(Kim, 2013: 97-125), 북한지역 안정화작전 대비 위기관리 능력(Lee, 2009: 45-68) 등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March & Simon이 주장한 갈등 모형인 주요 요인으로 공동의사결정의 필요성, 목표의 상이 또는 차별화, 인지의 상이 요인들을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군사통합, 6·25전쟁 및 이라크전 시 안정화작전 사례에 갈등요인들을 적용시켜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이를 한반도에서 통일시 갈등요인을 예측하여 갈등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질적인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과정의 모델인 통일독일과 6·25전쟁시 안정화작전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또한 이라크전간 안정화작전의 모습은 취약국가(fragile state)를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하여 시행된 안정화작전이므로 한국군에서 수행하는 안정화작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안정화작전에 있어서 미국은 다양한 안정화작전을 수행한 나라이므로 교훈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북한지역에서 안정화작전간 갈등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앞에서 설명한 연구방법과 연구의 전개과정을 도표화하면 아래의 <Figure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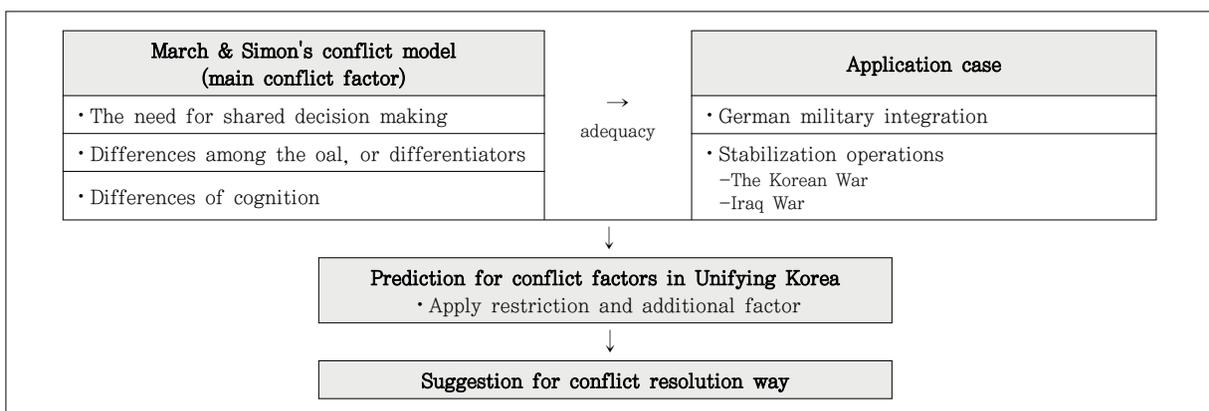


Figure 1. Analysis framework of research

III. March & Simon의 갈등모형 적합성

분석: 한반도 통일시 갈등요인 예측

1. 6·25 전쟁시 갈등사례

1) 공동의사결정의 필요성

6·25전쟁시 북한지역의 안정화작전시 유엔군과 한국군은 사전준비 및 양자 간의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본 절에서는 따라서 본 고에서 갈등요인인 공동의사결정의 필요성, 목표의 상이와 차별성, 인지의 상이 요인을 안정화작전시 유엔군과 한국군과의 갈등사례를 중점으로 논하고자 한다.

한국이 북한지역에서의 안정화작전 수행 현황은 <Table 3>에서처럼, 1950년 10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40여 일 동안 이루어졌다. 당시 한국군은 준비 부족과 북한에 대한 미국과의 입장차이로 제한적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었다.

공동의사결정이 되어야만 갈등이 최소화하는데 유엔과 한국정부간의 의사결정이 원만하지 않았다. 즉 한국정부의 일관된 주장은 ‘북진통일’이었지만, 유엔군 및 미국 등의 입장은 한국과 같을 수 없었다. 이유로는 6·25전쟁에 참전할 때의 목적은 38도선을 넘어온 북한군을 일소하는 것이었다(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2013: 236-237).²⁾ 그러나 ‘유엔군의 38도선 돌파’는 미국 정부가 ‘9.27훈령’을 통해 맥아더 원수에게 북진을 허가하고, 유엔 총회가 ‘10.7결의’에 의해

북진을 결정함으로써 공식화되었다(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2013: 243). 또한 유엔이 임명한 군정관들은 북한의 실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행정능력 부족과 군과의 원활한 협조 부족으로 체계적인 민군작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Republic of Korea Army Training & Doctrine Command, 2015: 4-1~4-4-10).

2) 목표의 상이 또는 차별성

국군 및 유엔군의 북진에 따라 한국과 미국 정부 간에 북한 점령지역의 통치권 문제가 대두되었다. 한국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북한 지역의 통치권은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가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탈환된 북한지역은 즉시 한국 정부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쟁을 주도하고 있던 미국 정부는 북한지역에 대한 한국정부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통일한국의 문제는 유엔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점진적인 통일정부 수립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3단계의 군정정책을 수립하였다(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2013: 254-255). 이처럼 국군과 유엔군의 수복지역에 대한 통치권의 개념이 서로 상이하여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다.

북한지역에 진주한 한국군과 유엔군은 작전초기에는 북한주민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으나, 점차 민심

Table 3. Status of the stabilization operations in the Korean War

Division	Contents
Term	• 1950 October - December(about 40 days)
Performing troops	• South Korean 3rd Division, Capital Division, Eighth US Army, US 1,10 Corps
Performing Mission	• Military occupation by each group
Performance result	• Difference in US and ROK army position • Administrative capacity and lack of understanding North's reality • Lack of preparation for civilian operations (Selection of military officers, education, etc.)

2) 미국정부에서도 “38도선을 돌파해야 한다”는 주장과 “38도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트루먼 행정부는 “38도 돌파문제”를 신중히 검토했다. 그러나 변수는 중국과 소련이 개입 가능성이었다. 유럽의 여러 나라도 전쟁의 불씨가 유럽으로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영국을 비롯한 자유진영 8개국도 “38도선 돌파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해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트루먼 대통령은 9월 11일, “중국과 소련이 개입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지상작전을 북한지역으로 확대한다”는 합참의 방침을 승인하고, 9월 27일 훈령으로 맥아더에게 하달했다.

을 잃게 되었다. 이유는 북한 공산군의 격멸과 북한의 점령이라는 군사적 승리라는 것에만 도취한 상태에서 점령지역에 대한 통치에 대해 준비, 관심이 부족하였다. 또한 한국군과 유엔군에서 제시된 군정방침 또는 정책들이 즉흥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더욱 북한 주민들을 실망시킨 것은 점령한 한국군과 남한에서 입북한 사회단체원들이 점령군처럼 행세하여 개인가옥을 불법점령 및 귀중품들을 강탈하기도 하는 등 심각한 상태였다(Republic of Korea Army, 2012: 286).

3) 인지의 상이

국군과 유엔군의 수복지역 통치권 개념을 가지고 한국 정부와 유엔군간의 문제가 대두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총회 임시위원회는 10월 12일, 북한 점령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엔은 한반도 전역을 합법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합법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바 없다”는 내용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유엔은 한국 정부의 북한지역 통치권을 부인하는 한편, 유엔군사령부와 유엔 통일한국부흥위원단이 협의해 북한지역을 상대로 군정을 시행하도록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한국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의 결의 내용을 완강히 반대하였다.

그래서 북한지역에 한국 정부가 파견한 관리와 유엔군사령부가 임명한 행정관이 파견지에서 행정기관을 두어 북한 주민들은 어느 편의 말을 들어야 할지 분간할 수조차 없게 되어 점령정책 시행에 적지 않은 혼선이 초래되기까지 되었고(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2013: 254-257), 미군이 주민들에게 가혹행위 등으로 민심을 이반시키는 결과를 유발시켰다. 이처럼 점령지역에서 현실문제인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 인식하는 것이 선행조건임을 깨달아야 한다.

2. 이라크전시 갈등사례

2003년 3월 20일 미군은 개전을 선포한 이후, 3주 만에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신속히 점령하였으며, 27일 만에 전쟁승리를 선포하였다. 그러나 전쟁승리를

선포한지 6년이 지난 후에도 이라크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였다. 그렇다면 안정화작전은 성공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갈등요인인 공동의 사결정의 필요성, 목표의 상이와 차별성, 인지의 상이 요인을 미국군과 이라크 주민간의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공동의사결정의 필요성

미군은 이라크에 대한 전쟁 명분을 찾기에만 급급했고(제648호, 1990), 승리에만 집중하다보니, 승리 이후의 안정화작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매우 부족하였다. 부시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2002.9.12), 후세인에 대한 최후 통첩성(2003.3.17) 발언만 있을 뿐 이라크의 미래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였다(Republic of Korea Army Training & Doctrine Command, 2009).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전쟁은 군사작전에만 치중하였으며, 안정화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수립하지 못하였다.

2002년 12월,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전후 이라크의 작전을 주도할 권한을 주었으나, 국방부 내의 협조의 부재와 유관기관과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그 이점이 실현되지 못하였다. 국방부는 2003년 1월 20일이 되어서야 재건 및 인도주의 지원국을 창설하여 미 정부 내에서 다른 유관기관들 즉, 미 중부사, 지상군사령부와 재건 및 인도주의 지원국 간의 전쟁이전 협조의 수준은 아주 미미했다(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2013: 334-335). 또한 2003년 5월에 재건 및 인도주의 지원국이 연합군 임시행정청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7연합합동기동부대는 6월이 지나도록 그들의 노력을 통합하여 이라크 내에서 완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지 못했다(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2013: 335). 이처럼 상호간의 의사를 일치시켜 결정해야 하나 그런 여건이 되지 못했다. 이유로는 국방부의 군 지휘구조를 재편하였고, 지상군사령부로 지정되어 활동하던 부대인 제3군이 철수하였고, 임무 수행 경험이 없던 부대로 교체되는 등 노력의 통합이

되지 못하고 기능조차 발휘하지 못했다.

2006년 12월 이라크 치안을 회복하기 위해 이라크에 중파 결정은 중파의 집행을 담당하는 미군 지휘관은 '패전 처리를 담당하는 기본'이었다고 회고(Thomas, 2009: 106)한 것처럼 일종의 도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파는 성공하였다. 자세한 논의는 '3) 인지의 상이'에서 언급하겠지만, 부시 미 대통령은 중파결정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어떤 선택을 해야 했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상부계층으로 올라갈수록 공동의사결정의 필요성은 증대되는데, 부시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중파를 결정했다.

2) 목표의 상이 또는 차별성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전에 대한 종전을 선언한 2003년 5월 1일 이후 미국은 무기반납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채, 이라크 군을 해체하여 치안불안을 야기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이라크의 바그다드 주민들은 미군정 입성을 환영하였지만, 입성 3주 만에 반미운동으로 확산되어 미군들의 철수까지 주장하는 양상으로 심화되었다. 그리고 실업률 60%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반미시위가 지속되었고, 석방된 죄수들에 의한 절도, 강간, 약탈 등이 자행되었으며, 미군의 검문 검색시 현지문화와 종교적 습관을 고려하지 않아서 이라크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이라크 과도정부 구성원 중에서 시아파가 13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과거 권력을 독점했던 수니파는 5명에 불과하였다(Son, 2014: 111-114). 즉, 수니파는 이슬람 세력의 주도세력으로 전 세계 이슬람 신도의 90%를 차지하였는데, 과도정부 구성원 중에서 소수인원이 구성되어, 종파 및 종족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2003년 4월이 지나면서 이라크 내 미군의 투입되는 병력이 있었지만 일부는 취소되고, 일부는 고국으로 복귀하는 등 병력 구성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2003년 6월 1일부터 미군정체제로 전환되면서, 이라크 임시행정체로 변경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었다. 총인원 800여 명 중에 이라크 전문가는 단 1명, 아

랍어 구사능력을 갖춘 자는 17명이었다. 전체 800여 명 중에 144명은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아니며, 임시행정체장직을 수행하는 인원도 이라크인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행정전략을 수립해야만 했다(Son, 2014: 93-114).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라크인들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3) 인지의 상이

2006년 여름, 전쟁은 3년 넘게 계속되면서 1일 평균 120명 정도의 이라크인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미군들의 피해도 2,500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바그다드 일대의 치안을 위해 2006년에 대규모로 실시된 미군과 이라크 보안군의 합동전진작전도 실패로 돌아갔다. 미국 국민들의 여론도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 하에서 베트남전의 경우처럼 국가의 명예가 실추되고,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Son, 2014: 269). 2006년 9월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이라크 전쟁 전략을 재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외부 전문가들은 병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고, 더욱 공격적인 對반란전 전략을 권고하기도 하고, 특수작전에 대한 비중을 높이라는 주문도 하였다.

2006년 12월, 이라크 연구단에서는 3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라크 보안군을 훈련시키는 기존 전략을 강화하면서 미군 병력을 서서히 철수하여 이라크 군이 폭력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종파 간 폭력사태가 가라앉을 때까지 미군 병력을 바그다드에서 철수시켜 놓은 것이었다. 즉 상황을 지켜보자는 것이다. 셋째, 병력을 배가하여 바그다드에서 전면적인 반군 소탕작전을 펼치는 것이다(Son, 2014: 270).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병력을 어느 정도 증파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으나, 군 내부에서는 서로 의견들이 달랐다.

미국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서 패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 하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2006년 12월 13일 펜타곤에 있는 합참 회의

실 탱크를 방문하여 군 지휘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지 지휘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바그다드에 5개 여단을 보내고, 안브르 지역에도 2개 해병대대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이라크 민간부문의 지원을 강화하고 육군과 해병대의 규모를 9만 명까지 의회에 요청하여 시행하게 되었다(Son, 2014: 271).

부시 미 대통령은 증파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하기 위해서 군 내부 및 현지 지휘관,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현실 문제를 전부 수용해 대안을 결정하였다. 만약 군 내부 및 여러 전문기관들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인식 내용을 수용하지 않고 행정부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을 했다면 갈등을 초래하고 이라크작전에서 큰 실패를 당했을 것이다.

3. 독일의 군사통합간 갈등사례

1) 공동의사결정의 필요성

통일 전 동서독 국방부 간에는 군사통합과 관련한 큰 논쟁이 있었다. 서독측은 1국가 1군대 원칙에 입각하여 동독 인민군을 해체하자고 주장한 반면, 동독측은 연방군과 동독 인민군이 각각 독자적으로 존립하는 1국가 2군대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논쟁은 90년 7월 콜 수상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통일독일은 군사동맹체제 소속문제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합의함에 따라 일단락되었다.

서독의 국방부는 1990년 3월말 타 부서보다 늦게 접촉했지만 정확하고 신속하게 동독군을 인수했다. 인수 과정과 인수 후에도 단 한건의 쿠데타 또는 장비 밀매나 유통이 없었다. 서독은 동독 군 국방조직, 병력 그리고 무기·장비들을 성공적으로 인수했다.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에 동서독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보다는 서독의 일방적 계획에 의해 추진되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어 다른 체제와 이념에 따라 사고방식, 관습방법 등이 달라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독일의 한 연구소에 의한 '독일국민으로서의 소속감'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통일독일과 동일시하는 구 서독주민들의 비율은

57%(1991), 34%(1994), 68%(1995)로 꾸준히 늘어난 반면, 구 동독주민들의 비율은 37%(1991), 34%(1994), 37%(1995)를 나타내어 서로 간에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독일통일은 국가의 정책으로 동서독의 양 체제를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에는 부인할 수 없지만,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미흡한 편이다. 이는 통일 후 독일국민, 특히 구동독의 주민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통일독일의 국민으로서의 이질감에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공동의사결정에 따라 이질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정신적인 측면에서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목표의 상이 또는 차별성

독일통일은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진행됨에 따라,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태였지만, 군사통합은 전반적으로는 완벽하게 수행하였고, 통합 독일군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의 군사통합은 정치적 합의 후, 정치·경제·사회 통합의 일환으로 통일 과정의 최종단계에서 진행되었으므로 군사통합은 동등의 통합보다는 다소 강제적 흡수통합 형태로 진행되었다. 독일 국방성의 각 부서별 군사통합 실무자 250여 명을 동독 국방부에 파견하여 통일 독일 연방군을 형성 할 준비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였다.

서독연방군은 동독인민군 예하 1,460개의 대대급 이상의 부대를 인수하였다. 동독인민군의 핵심부서인 국방부, 정보 및 보안부대와 국경수비대는 통합 직전 동독 국방장관 명령으로 이미 기능이 정지, 해체하기로 결정되었다. 그 외에도 병무행정청과 5개 고급사령부 등 고위 정책부서와 군사정치학교, 장교학교 등 국방부 직속의 16개 부대, 예비군 및 민방위조직 등은 통합직후 해체되었다. 또한 동독인민군들은 서독연방군의 흡수통합 방안에 위협을 느껴 1990년 8월 3일 양독 정부에 동독인민군의 장래를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동등하게 대우 및 인사선발위원회에도 동독군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각양각색의 전폭적인 찬성에서 절대적인 반대에 이르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형성하였다(Ha, 1996: 151-159).

통일 직후 동독 출신 군인들은 연방군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동독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 집단에 속했었다가 통일 후에는 그 동안 누렸던 사회적 신분을 포기해야 했고, 주요 지휘관 및 참모는 서독 군 출신이 독점하는 등으로 심리적으로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서독과 동독의 체제통합은 전혀 다른 이념과 체제를 바탕으로 반세기동안 유지되어 오다가 통합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여러 가지 있지만 심리적인 어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개인적으로 소외감, 타인과의 비교의식에 대한 불안감, 자신들이 살았던 사회와 가치관에 대한 실망과 죄책감 등을 들 수 있다(Jeon, 2000: 188-206).

따라서 군사통합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른 분야의 통합과 달리 군사 분야를 통합하는 것은 통합대상이 느낄 수 있는 상실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즉 가치와 인식측면에서 소외감, 불만감, 죄책감 등을 배제하도록 하여 동서독군 출신이 동일하게 공감 및 인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절차측면에서 면밀히 검토, 계획수립, 시행이 되어야 한다. 통합과정에서 양국 간의 목표의 상이는 크게 없었으나, 군사통합과정에서 다소 차별성은 존재하였다.

3) 인지의 상이

동독주민의 경우 통일 후 생활하면서 국가의 정책과 경제발전에 귀속성을 느끼거나 서독주민과 똑같은 정체성을 공유할 수가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동서독 주민들 사이에서도 연대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통일 이전 서독인들은 동독과 많은 교류와 접촉을 통해 이해한다고 수용하였으나, 그렇지 못하였고 동독인들이 스스로 2등 국민이라는 열등감, 사고방식의 괴리 등으로 이질감이 심화된다는 사실이다.

4.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지금까지 통일독일, 6.25전쟁, 이라크 전쟁 사례에 마치·사이몬이 주장한 집단간 갈등모형을 적용하여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적합성 검증결과로 공동의사결정의 필요성, 목표의 상이 또는 차별화 요인은 적용 가능 및 적합 하였지만, 인지의 상이 요인은 군사통합 및 통일과정과 안정화작전시에는 미인지의 영향 요인은 주요 요인으로 보기 부적합하다. 따라서 적용하기에는 제한적이지만, 북한지역에서 안정화작전시 반세기 이상 남북분단으로 이념의 차이가 극심한 부분이 크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치관 형성 요인을 추가하였다.

통일독일과 6·25전쟁 및 이라크전에서의 군사통합 및 안정화작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통점을 도출하면 통합방식이든 합의 및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든 군사통합 및 안정화작전은 속도 면에서 매우 급진적으로 진행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의사결정을 통해 차별화가 없도록 군사통합을 위한 계획 및 시행해야 한다. 군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통합도 중요하지만 화학적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서독은 국경경비대를 제외하고 서독군은 495,000명, 동독군은 173,100명에 불과하였는데, 통일 후에는 370,000명이었다. 즉 전역군인의 수는 298,100명이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북베트남군은 583,000명, 남베트남군은 565,000명, 통일 후에는 615,000명이었다. 전역군인의 수는 533,000명이다. 통합을 주도했던 국가의 군이 수적으로 많았거나 최소한 동등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통일한국의 경우에는 북한군은 1,200,000명, 한국군은 630,000명이므로, 통일 후에는 1,000,000여 명이 전역하게 될 것이다. 통일독일의 경우에도 동독지역에서 실업률이 3배 증가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통일한국의 경우에도 통일독일보다 대규모 전역자가 발생이 예상되고,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전역자에 대한 직업보조, 생계수당 등을 강구하여야 하며, 군인의 수도 적정규모로 감축을 해야 한다.

둘째, 통합하는 양국 간의 목표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6·25전쟁 간 국군 및 유엔군의 북진에 따라 한

국과 미국 정부 간에 북한 점령지역의 통치권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라크 전쟁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전에 대한 종전을 선언한 2003년 5월 1일 이후 미국은 무기반납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채, 이라크 군을 해체하여 치안불안을 야기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이라크의 바그다드 주민들은 미군정 입성을 환영하였지만, 입성 3주 만에 반미운동으로 확산되어 미군들의 철수까지 주장하는 양상으로 심화되었다. 독일의 군사통합은 동서독 간 동등의 통합보다는 다소 강제적 흡수통합 형태로 진행되어 차별로 인하여 갈등을 초래하였다.

셋째, 북한지역에서 안정화작전시 반세기 이상 남북분단으로 이념의 차이가 극심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치관 형성으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정치, 사회, 군사적인 상황 및 전장 환경을 고려할 때, <Table 4>에서처럼(Republic of Korea Army Training & Doctrine Command, 2015: 1-10~1-12), 생필품 부족, 주민들의 전쟁공포심 및 불안감 등으로 약탈행위, 피난민 발생, 기반시설 지원체계 붕괴로 감염병 발생 등이 안정화작전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요인이므로 이러한 점을 면밀하게 대비하여 안정화작전이 계획수립 및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IV. 북한지역에서 안정화작전시

갈등해소 방안

통일을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독일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환경 속에서

살아오던 두 집단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 있어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갈등의 해결책을 위해서면 다음의 가능성으로 첫째, 양쪽 모두 자기만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의 해결책에 동의하지 못할 때와 둘째, 한쪽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쪽이 따르지 않을 때, 셋째, 양쪽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해결책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이다. 이미 있는 해결책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으로 인하여 통일 과정 및 이후에 후유증으로 사회화 문제가 대두가 예상되는데, 사례에서 나타난 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March & Simon이 주장한 집단 갈등모형 요인인 공동의사결정의 필요성, 목표의 상이 또는 차별화, 인지의 상이 요인을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군사통합, 6·25전쟁과 이라크전의 안정화작전 사례에 적용하여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적합성 검증결과로 공동의사결정의 필요성, 목표의 상이 또는 차별화 요인은 적용 가능 및 적합 하였지만, 인지의 상이 요인은 적용하기에는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북한지역에서 안정화작전시 반세기 이상 남북분단으로 이념의 차이가 극심하여 적용이 제한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치관 형성 요인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 시 군사통합 및 안정화작전시 남북한 사회가 겪어야 할 갈등의 양상을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Table 4. Inhibition factor in stabilization operation

Division	Inhibitory Factor
Remaining Force Resistance	Armed groups, such as the armed paramilitary group, the terrorist and hostile forces, armed force like a organized criminal and organized resistance of the leaders of the regime in North Korea,
Military Intervention	The spread of the fear of war, the depredation for the lack of food and living necessities, military operation obstruction and the social unrest increase
Collapse of Infrastructure Support System	The collapse of public service, electric power and medical support system due to the destruction of electricity power, water supply, communication, transportation network, etc. and the administrative paralysi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ecurity threats of residents due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non-collected weapons
Infectious Disease	Inhabitant's hunger phenomenon, lack of drinking water, infectious disease

1. 차별 최소화를 위한 공동의사결정으로 군사통합 시행

공동의사결정을 통해 차별화가 없도록 군사통합을 위한 계획 및 시행해야 한다. 군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통합도 중요하지만 화학적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25전쟁간 북한지역의 안정화작전시 유엔군과 한국군은 사전준비 및 양자 간의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었고, 2003년 3월 20일 이라크전시 미군은 개전을 선포한 이후, 3주만에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신속히 점령하였으며, 27일 만에 전쟁승리를 선포하였다. 그러나 전쟁승리를 선포한지 6년이 지난 후에도 이라크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였다. 즉, 미군은 이라크에 대한 전쟁 명분을 찾기에만 급급했고, 승리에만 집중하다보니 승리 이후의 안정화작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매우 부족하였다. 통일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에 동서독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보다는 서독의 일방적 계획에 의해 추진되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따라서 공동의사결정에 따라 군사통합을 시행한다면 이질감 및 정신적인 측면에서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통일한국의 목표 일치 설정: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북한지역에서 안정화작전의 의미는 북한의 급변사태 등으로 통합 및 통일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통일한국에 대해 주변국들은 각 국가가 처하게 될 국제관계 변화와 통일한국의 군사적 위상에 대해 우려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한국군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설정해야 하고 주변국들이 통일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아야 하며,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명확한 방향 및 지향해야 하는 점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국방정책이란 국가의 안전보장을 뒷받침하는 개념으로서 통일한국이 맞이하는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국방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적 국방정책을 기본으로 마련되어야 한다(Jeong, 2014: 188-189).

통일한국의 국방정책 목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원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의 통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구성원의 상호이익과 인간적 삶의 질을 크게 신장시키고 있기 때문이다(Kim, 2002: 308). 현재 한국의 국방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한다”로(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17: 37) 되어 있다. 이처럼 통일한국의 국방목표는 통일한국의 국익차원에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위해야 하고, 향후 통일 한국이 선진강국으로 진입 및 발전하도록 선제적 지원하는 개념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통일한국의 국방목표는 첫째, 첨단 군사력과 군사외교 활동을 통해 한반도 및 주변전쟁을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군사력 건설이 요구된다. 둘째, 지역안보에서의 역할을 증대하고, 인접 국가와 협력을 유지하는 노력과 아울러 범세계적 군사 활동을 통해 국민의 국제적 활동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평화유지군 파견과 같이 국제적 평화유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독일이 주변국들에게 군축 통제정책을 인식시키기 위해 NATO 잔유, 병력제한, 방어위주, 비핵주의 등의 정책을 시행하여 주변국들에게 두려움을 잠재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독일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반도가 통일되는 시점에는 세계화가 더욱 심화되어 주변국들로 부터의 견제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적극적인 협상력이 요구될 것이다(Jeong, 2014: 189-190). 따라서 경제적 번영과 국가발전이 안정적이 되도록 외교 협력을 통해서 주변국들로부터 지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통일한국의 국방목표는 대북개념에서 주변국가들에 대한 대비개념으로 전략수정이 필요하다. 즉 특정의 적대세력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을 상정하고, 이러한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억제개념을 구현하도록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군사통합의 목표설정은 이러한 통일한국의 지향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군사통합의 목표는 정통성과 안정성, 효율성을 가져

야 한다.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군은 하나의 무력집단에 불과하고 국가가 지향하는 바를 수호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또한 군사통합과정 및 통합 후에 군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정착되어야 함을 뜻한다 (Kwon, 2009: 114-115). 특히 초기에 군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가 군사통합 자체의 성패는 물론 국가통합 내지 성패도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군사통합 과정에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확립된 가운데 혼란 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3. 가치관 형성으로 정체성 확립

독일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동독주민들은 통일로 인하여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처럼, 북한주민들도 물가상승, 주택난, 실업 등으로 부정적인 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동서독의 경우 통일 초기 실업률이 40%(320만 명)에 달했다. 북한지역에서

도 높은 실업률, 물가 폭등, 국영기업 폐쇄 등의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북한에는 1,100만의 경제활동 인구 중 30%인 330만 명, 혹은 100만 명의 도시 노동자가 실업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실업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실업이란 개념조차 없었던 사회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던 북한사람들은 사회관계마저 고립 및 혼재되어 자아 정체감을 상실하거나 무기력증에 빠짐으로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판단한다 (Yeom, 2012: 141-147; Kim, 2015: 89-90).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제도적 방안과 가치관 형성 방안으로 구분된다. 제도적 방안은 이익과 가치의 배분에 관련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절차와 규범을 만들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가치관 형성방안은 일종의 인적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구성원들이 공통의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룩

Table 5. Public relations operation / evaluation index by target

Area	Object	Subject	Way	
Liberalized area	Common	Promoting continuous humanitarian assistance between the U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roadcast (TV, Radio) Wallpapers, Announcement Banners Electric Signboard, A Startup Loudspeaker	
		Promoting the brotherly love and present a safe and happy future		
		Exposure of past North Korean regime		
		North Korean Exile Government's unfairness, illusion		
		Confidence diffusion for the consistent policy		
	North Korea regime/ A key force	Knowing the failure regime		
		Propagation of hostility toward residents' regime		
		Promoting secure personal safety system when they are turning		
	Residue / Resistance force	No more resistance or sacrifice		Spreading of the fact about escaped high-ranking officials and military commanders etc. of the regime
				The war is already over and residents turn their backs on.
		Continue to promote the fact that when they are resisting, they are counted to the war criminal		Spreading the facts of supreme leader's missing or escape
				Promoting a new life case with humanitarian assistance
	Agitation force	Promoting the case of defector and convert (guarantee of the personal safety)		
		Promoting the establishing found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such as re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Promoting reward for the cooperation in stabilization operation
Inducement of the sense of betrayal to the regime in North Korea, proliferation of anger, and early stabilization				
Friendly force				
Domestic	Nation	Promoting stable operation performance to support the US-ROK alliance	Broadcast (TV, Radio), Cyber	
		Emphasis on unity of people (Block North Korean followers)		
Oversea	International society including China and Russia	Exposing North Korea's atrocitie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hina and Russia's military intervention (international criticism)		
		The unified Korea will be beneficial to the national interest and the national interest.		
		Perception of continuing the support to prevent WMD spread		

※ Source: Republic of Korea Army Training & Doctrine Command(2015: 4-73~4-74)

하는 것이다.

안정화작전은 공격·방어 작전 시와 달리 북한정권과 핵심세력, 잔적과 저항세력, 동요세력, 우호세력 등 대상별과 국내외 지역을 고려한 차별화된 맞춤형 홍보작전을 시행, 평가를 통한 작전성과를 제고하도록 <Table 5>와 같이 대상별 주제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평화와 화합을 달성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통합을 달성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국가 건설과 같은 정치제도의 골격을 새로 마련하는 차원의 정치적 통합이 있으며, 국가 내에서의 정치적 자원, 권력을 둘러싼 정치적 경쟁과 대립을 해결하는 정치과정 차원의 통합이 있다. 통일 이후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정치제도 차원과 정치과정 차원의 통합과 관련되어 있다. 이처럼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이 서로 다른 정체성을 넘어 통일국가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므로 남북한의 상반된 체제 및 민족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인 기존과 다른 제3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여야 한다.

V. 결론

서로 다른 두 개의 집단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다. 특히, 체제가 다른 집단이 반세기 이상 분단되어 생활해 오다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물리적인 통합이 되더라도 화학적인 통합이 원활하지는 못할 경우에는 사회전반에 걸쳐 갈등이 커져 사회적 혼란으로 야기될 수 있다.

독일의 군사적 통합과정에서의 갈등사례와 6·25전쟁과 이라크전에서의 안정화작전시 갈등사례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한의 급변사태 등으로 북한지역을 안정화시켜야 할 상황이 온다면, 어떤 과업을 수행해야하는지를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군사통합, 6·25전쟁 및 이라크전의 안정화작전간 갈등사례를 분석하여 현대전에서 안정화작전의 중요성과 사전준비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다

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수립의 소요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측면이 안정화작전 초기에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업이므로 현대전에서 군사적으로 승리를 하더라도 군사·비군사적인 부분이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국내외 여론과 민심이반 등으로 인하여 전쟁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정화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후유증들에 대한 갈등해소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지역에서 안정화작전시 갈등해소 방안은 차별 최소화를 위한 공동의사결정으로 통합 시행하여야 하고, 둘째, 통일한국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일치 설정이 필요하며, 셋째, 사회구성원들이 가치관 형성을 위한 정체성 확립으로 공통의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사회통합을 이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 연구 및 발전의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결과적으로 안정화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후유증들에 대한 갈등 요인들을 사전 배제하도록 계획하고 제 작전요소들을 통합, 운용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References

- Ahn, Kwang Il. 1994. *Management of Government Conflict*. Daemyung Army Military Institute. 2013. *A Case of Failure and Lesson from the Korean War*. Armed Forces Print Office.
- Cho, Seong Je. 2014.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Stabilization Operation at Sudden Changes in North Korea.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 Chun, Dae Yun. 2005. *Conflict Management and Negotiation Strategy*. Sunhaksa.
- Ha, Jeong Yeol. 1996. *Military Integration Plan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al-Bok Won.
- Hong, Seong Yi. 2003. A Study on the Integration and Social Conflicts in the Unification of Korea. Master's Thesis.

- Gyeonggi University.
- Jeon, U Taek. 200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n Refugees and South Korean Society and Psychological Conflict*.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Jeong, Chung Yeol. 2014. *Strategy for Military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Mizuki of Time.
- Jeong, Ung Kyu. 2016.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Korea Stabilization Operation through Analysis on America's Iraq Stabilization Operation.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 Kim, Kwan Ho. 2012. Research on Minimizing Aftereffect When Unification North and South Korea: Focused on Integrating Military Areas. *North Korea*. 37(2): 84-116.
- Kim, Kwang Youl. 2002. Factors and Countermeasures for Military Integration and Confli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Journal of Korean Political Science*. 23: 19-46.
- Kim, Eui Sik. 2014. *Military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Strategy for Stabilizing North Korean Nuclear Arms*. Seonin.
- Kim, Eui Sik. 2015. A Study on the Training of Military Integration Experts in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Study of Korea-Japan Military Culture*. 20: 161-187.
- Kim, In Soo. 2013. A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Korean Army's Peacekeeping Activities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Stabilization Operation. *Military*. 88: 97-125.
- Kwon, Yang Ju. 2009. *North-South Military Integration Initiative*.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zes.
- Lee, Do Seung. 2005. *A Study on the Solution of Social Conflicts in the Process of the Large-scale National Project: Focusing on the Role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 Lee, Dong Yoon. 2002. Division and Conflict, and Unification: A Comparison Study on Conflict Management Case in Germany, Yemen, Vietnam. *Unification Policy Research*. 11(2): 179-204.
- Lee, Gee Dong. 2009. Contingency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Our Countermeasure. *North Korea News*. 34(2): 45-68.
- Lee, Ohn Juk. 1997. *Inter-Korean Social Integration Theory*. Life and Dream.
- March, J. G. and H. A. Simon. 1996. *Organizations*. John Wiley & Sons.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17. *2016 Defense White Paper*. Ministry of Defense.
- Nam, Sung Wook, Yong Han Park, and Pyung Se Cho. 2016. Effective Stabilization and Consolidation Strategies after North Korea's Sudden Change. *Defense Research*. 59(1): 1-28.
- Park, Hong Yeub. 2005. *Analysis of Laws and Systems Related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flicts and Effective Management Plan*.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Park, Yong Han. 2016. A Study on North Korea's Sudden Change and Korea's Stabilization Strategy: The Implication of the Unification between the Two Koreas. Ph.D.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 Republic of Korea Army Training & Doctrine Command. 2009. *Stabilization Operation Development Direction*. Armed Forces Print Office.
- Republic of Korea Army Training & Doctrine Command. 2015. *Stabilization Operation*. Armed Forces Print Office.
- Republic of Korea Army. 2012. *6·25 War and Military Operations in Record*. Armed Forces Print Office.
- ROK - Joint Chiefs of Staff (ROK-JCS). 2009. *Report on the Results of US Civil Service Visit*. Joint Chiefs of Staff, JCS.
- ROK - Joint Chiefs of Staff (ROK-JCS). 2013. *Ulchi Exercise 2012 Review Data the Joint Chiefs of Staff*. Joint Chiefs of Staff, JCS.
- Son, Seok Hyun. 2014. *Iraq War and Stabilization Operation*. Military Institute of Military Studies.
- Stanley, Hoffmann. 1968. *Gulliver's Troubles, or the Setting of American Foreign Policy*. McGraw-Hill.
- Thomas, E. 2009. *Ricks*. The Gamble Penguin Press HC.
- Yeom, Don Jay. 2012. The Lessons of German Reunification and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Korean Journal of Veterans Affairs*. 11(2): 125-150.
- Yun, Jong Seol. 2014. A Study on Conflict Prevention and Response Indicators Constr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Conflict Occurs Factors. *Policy Development Research*. 14(2): 37-59.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국방부. 2017. 2016 국방백서. 국방부.
- 권양주. 2009. 남북한 군사통합 구상. 한국국방연구원.
- 김관호. 2012. 한반도 통일시 후유증 최소화 방안 연구: 군사분야 통합을 중심으로. 북한학. 37(2): 84-116.
- 김광열. 2001. 남북한 군사통합. 갈등요인과 대책. 세계지역연구논총. 17: 19-46.
- 김의식. 2014. 남북한 군사통합과 북한군 안정화전략. 선인.
- 김의식. 2015. 남북한 통일시 군사통합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20: 161-187.
- 김인수. 2013. 안정화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군의 평화유지활동 참여방안. 군사. 88: 97-125.
- 남성욱, 박용한, 조평세. 2016. 북한의 급변사태 이후 효율적인 안정화와 통합전략. 국방연구. 59(1): 1-28.
- 박용한. 2016. 북한의 급변사태와 한국의 안정화 전략에 관한 연구: 남북한 통합의 함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홍엽. 2005. 국내외 갈등관련 법·제도 분석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손석현. 2014. 이라크 전쟁과 안정화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심리학용어사전. 201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94134&cid=41991&categoryId=41991>.
- 안광일. 1994. 정부갈등관리론. 대명사.
- 염돈재. 2012. 독일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통일. 한국보훈논총. 11(2): 125-150.
- 육군교육사령부. 2009. 안정화작전 발전방향. 국군인쇄창.
- 육군교육사령부. 2015. 안정화작전. 국군인쇄창.
- 육군군사연구소. 2013. 6·25전쟁의 실패사례와 교훈. 국군인쇄창.
- 육군본부. 2012. 기록으로 본 6·25전쟁과 민군작전. 국군인쇄창.
- 윤종철. 2014. 공공갈등 발생요인에 따른 갈등예방·대응지표 구축. 정책개발연구. 14(2): 37-59.
- 이기동. 2009. 북한 급변사태시 우리의 대응방향. 북한학보. 34(2): 45-68.
- 이도승. 2005. 대형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갈등 해소 방안 연구: 감사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감사원.
- 이동운. 2002. 분단과 갈등, 그리고 통일: 독일, 예멘, 베트남의 갈등관리 사례 비교. 통일정책연구. 11(2): 179-204.
- 이은주. 1997. 남북한 사회통합론. 삶과 꿈.
- 전우택. 2000.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과 심리갈등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0(1): 67-91.
- 정응규. 2016. 미국의 이라크 안정화작전 분석을 통한 대한민국 안정화 작전 발전방향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충열. 2014. 남북한 군사통합 전략. 시간의 물레.
- 조성재. 2014. 북한급변사태시 안정화작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천대운. 2005. 갈등관리와 협상 전략론. 선학사.
- 하정열. 1996. 한반도 통일후 군사통합방안. 팔복원.
- 합동참모본부. 2009. 미국 민사부대 방문결과 보고서. 합참.
- 합동참모본부. 2013. 2012년 을지연습 강령자료합동참모본부. 합참.
- 홍성이. 2003. 분단통일국의 통합과 사회갈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Received: May 2, 2017 / Revised: Jun. 6, 2017 / Accepted: Jun. 15, 2017

북한지역 안정화작전시 갈등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초록 본 연구는 현대전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안정화작전 수행과업 중 연구가 미흡한 갈등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마차·사이몬(March & Simon)이 주장한 집단 갈등모형 요인인 공동의사결정의 필요성, 목표의 상이 또는 차별화, 인지의 상이 요인들을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안정화작전 사례에 적용하여 집단 갈등모형 요인들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적합성 검증결과로 공동의사결정의 필요성, 목표의 상이 또는 차별화 요인은 적용 가능 및 적합하였지만, 인지의 상이 요인의 경우에는 국가단위에서의 적용이 제한되어 가치관 형성 요인을 추가하였다. 북한지역에서 안정화작전시 갈등해소 방안은 공동의사결정으로 군사통합 시행, 통일한국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설정, 가치관 형성으로 정체성 확립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갈등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 및 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북한지역, 안정화작전, 갈등, 군사통합, 통일 한국

Profiles **Seung Hak Na** : He received Ph.D. in Political Science at th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n 2015 for “A Study on Factors of Change of Korea-US Alliance after the Post-Cold War.” He has been a professor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for five years and currently serves as a professor of military science at Cheongju University. Areas of interest include defense policy and strategy, and national crisis management. “A Comparative Study on the Military System of the Korean Navy in the Joseon Period before and after the Imjin Japanese Invasion” etc.(shakna@naver.com).

Cheol Ho Yang : He received Ph.D. in Public Administration from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t the Hannam University in 2015 for the evaluation of policies on international peacekeeping activities of the ROK Armed Forces. He served as deputy chief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Currently, he is a professor of military science at Cheongju University. Areas of interest include national crisis management, defense policy and leadership. “A Study on the Success Factors of the Assistance Support Activities in the Case of Overseas Disaster Crisis” etc.(y0300h@hanmail.net).